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 금 선 의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즉동 일원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과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이 절실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 입니다.

이 금 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선거구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유성구 구즉동의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몇 위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적습니다.

2017년 1.85명이었던 수치보다 25.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전국 89곳을 지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외 감소지수가 높은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18개 지역 중 대전시 동구와 중구, 대덕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를 살펴보면 2018년 2월 기준과 2022년 2월 기준으로 동구는 총 8,082명이 줄었고, 중구는 1만 8,480명, 대덕구는 1만 74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전시도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에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조직도에 의하면 3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10여 년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전형 양육수당과 인구정책위원회를 4월에 출범했지만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커녕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개최 계획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전시가 인구감소지역이 될 우려가 큰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공무원 3명이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인구감소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다자녀카드 발급, 정부미지원시설의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자치구별로 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등을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수당으로 통합되어 올해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다자녀카드 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하철 무료이용과 공영주차장 50% 할인, 민간우대업체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출산장려정책은 현물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규모도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임신과 육아 등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1만 5,560가구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19.9%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녀, 두 자녀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특히 두 자녀 가구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7년보다 18.1%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다자녀가구의 기준 자녀 수가 몇 명인가요?

대전시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의 경우 총 1만 2,530건 발급된 것으로 하나은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무임승차 인원은 239명뿐이었습니다.
이는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데 더해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의 경력 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셋 이상 가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탓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교육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관련 조례와 정책은 여전히 3명 이상 또는 둘째 이후의 자녀로 기준을 두고 있어 국가 정책 기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복지 분야에 다자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2인으로 완화, 다자녀가구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교통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수요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세종시는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여건이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 실태조사에 우리나라 영유아의 첫 보육기관 이용 연령이 0세는 20.4%이고 만 1세가 되면 79.3%로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보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는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에는 보육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03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0%에 불과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11.7%로 121개뿐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정부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3명 중 1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고용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사용은 물론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보육해야 할 아동이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보조교사 채용은 불가능하고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무엇보다 보육환경 개선, 즉 보육교직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간어린이집 3,238개소 중 15.9%에 해당하는 515개소를 서울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100% 시비로 140여 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교사가 원할 때 업무 공백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 지원 요구에 따라 정규직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 전담임교사들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60개소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보육도시 대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 어린이집 장기재직휴가 지원 등을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보육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대전형 육아수당 유지를 결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약보육과 긴급보육이 가능한 돌봄모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대전형 어린이집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다자녀가구의 지원 확대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구로 확대하여 아이 중심의 정책 환경으로 전환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즉동 일원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과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즉동 일원은 제1 위생매립장을 시작으로 제2 위생매립장과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전 예정인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운영이 완료될 제1 위생매립장을 대비하여 국내 지자체 매립지 종료 후 이용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다수의 매립지가 매립 종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외에도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 위치한 월드컵공원은 기존 난지도매립장으로서 매립이 중단된 이후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유니온타워가 위치한 하남유니온파크는 100m가 넘는 전망대와 어린이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하남시의 폐기물과 하수를 처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5년 운영이 완료되는 제1위생매립장과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와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구즉동 일원에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과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만 혐오시설이 몰리고 있다며 지금도 매립장으로 공해와 악취, 파리, 모기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인근지역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구즉동에 혐오시설만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현시점에서 주변 사업과 공존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환경개선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님비시설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유니온파크는 하남스타필드와, 월드컵공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상생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도 현 위치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대전시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구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시만의 랜드마크를 만들 기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대전시 미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또 이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또 구즉동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저출생 극복 보육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위기로, 또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가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극복을 해야 될 명확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기준은 0.81명으로 13위이고 또 시·도별 딱 평균 수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국 시·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높은 집값 그리고 갑자기 폭등했던 집값, 비싼 양육비 또 결혼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최근 코로나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 사교육비 같은 것이 늘어나면서 특히 우리 대전은 청년들의 인구가 유출된 데 있어서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은 세종시하고 저희의 인구구조가 조금 다르고 세종시가 대전보다는 훨씬 젊은 분포가 있다 보니까 세종시가 저희보다는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청년들에게 그 도시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주거 여건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살 수 있고 또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도시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대전은 청년들로부터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공적 돌봄시설 확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정책을 해야 되고요, 또 양육비 부담을 절감시키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제 일류도시도 결국은 청년들이 먹고살 문제, 이 도시에서 꿈을 키우는 문제, 이 도시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사실상 저도 출산정책에 대해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공직자가 정말 세밀하게 정책을 가다듬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도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조언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거, 여가문화 충족, 보육환경 개선 그리고 육아 지원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있는 집은 물론이고,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유형도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도 파악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또 나중에 교육하는 부담, 나중에 성장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경우에 우선 도시철도 무료이용, 또 협약업체 요금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이렇게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2자녀일 경우 시 철도광역교통과 예산에서 보면, 대전교통공사 무임손실에 대한 자료를 보면 2자녀까지 포함될 경우 무임손실이 37억쯤으로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7억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협약업체 요금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거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텐데 저는 이렇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정책을 투입하고 예산을 배려하는 게 애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구조조정하더라도 보육하는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명목의 예산을 통·폐합해서 2022년부터 연간 800억 원대 규모의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부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전임 시장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수당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대전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직접 재정 지원 이런 것은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자녀가정의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들이 더 발굴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장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건 좀 무책임한 일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서 더욱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반별 정원충족률이 한 65%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금년 3월부터 반별 운영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부터 7월까지는 391개소 574개 반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세대인 영유아보육의 안정성 확보 또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원충족률 제한 없이 전체 어린이집 968개소 4,171개 반으로 확대해서 약 5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방안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쨌든

현재로는 저한테 일단 보고된 건 내년 예산 중에 처우개선 예산은 한 14억 4천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내년도에 인상하고요, 연간 예상 소요액은 한 44억 원이 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예산 27억 원에 더하면 한 17억 원이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명절수당은 연 2회에 1회 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 2회에 10만 원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요, 기존 예산에다 7억 1천만 원을 늘려서 명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지원수당도 1년에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가능하면 이것도 한 6억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정책적인 공간이 있고 예산의 공간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나중에 가능하면 올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정서지원 등 힐링 연수프로그램 사업도 예산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된 예산이 156억 정도 되는데 170억 정도로 늘려서 14억 4천만 원 정도 확대하기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혹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또 열악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도시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돼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즉동에 보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제1 쓰레기매립장, 제2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복합적으로, 그 근처에 사는 시민들께서 우려하실 만큼 집중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145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고요, 없으면 145만 전체 시민이 아주 불편한 일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즉동 일원에 있는 많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편을 덜어드리고 이에 대해 피해를 입는 만큼 부지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다는 건, 저는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고요, 또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도 꼭 있어야 할 시설이고 또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꼭 있어야 할 시설인데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공동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보지는 않고 단지 이걸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산동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2025년까지 아마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매립 종료를 앞둔 제1위생매립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그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1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이 주변에 있는 포괄적인 땅들까지 포함해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용역결과가 물론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즉동 일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력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기 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